

독자권익위원회 칼럼

기본과 기준의 차이

이지안



에이아이티브 대표

'법은 만인 앞에 평등하다'는 말은 오래된 원칙이다. 사회가 안전하고 규칙적으로 이뤄지기 위해 만든 약속이다. 그러나 이 문장이 현실에서도 같은 무게로 작동하고 있는지 묻는 순간, 대답은 그리 단순하지 않다. 최근의 판결 몇 가지를 같은 선상에 놓고 바라보면, 법은 모두에게 같은 기본을 요구하는 듯 보이지만 적용되는 기준은 서로 다른 것처럼 느껴진다. 시민들의 분노와 허탈감은 바로 이 지점에서 시작된다.

김건희씨에 대한 1심 선고는 이러한 의문을 다시 수면 위로 끌어올렸다. 법원은 통일교 측으로부터 명품 가방과 다이아몬드 목걸이를 받은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했다. 반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과 무상 여론조사 제공 의혹에 대해서는 증거 부족 등을 이유로 무죄 판단을 내렸다. 법률적으로 보면 각 혐의별로 증거와 구성요건을 따져 내린 판단일 것이다. 그러나 시민들이 받아들인 것은 법리의 세부가 아니라 결과의 무게였다. 명품 수수와 주가조작 의혹이라는 중대한 사안이 제기된 사건의 결론치고는 형량이 '너무나 가볍다'는 인식이 대부분이었다.

이 판결이 사회적 논란으로 번진 이유도 여기에 있다. 1년 8개월이라는 형량의 숫자 자체보다 법이 작동하는 방식에 대한 체감이 문제였다. 권력과 명성에 얹힌 사건에

서 법은 유난히 신중하고 포용적으로 보인다. 증거를 엄격하게 따지는 듯하지만, 최종 판단은 관대하기까지 하다. 반면 시민의 일상에서 벌어지는 사건에서는 법이 훨씬 단호하고 결과까지 엄격하게 작동한다. 이러한 대비는 단순한 짐작에 그치지 않고 확신처럼 굳어지고 있다.

한 예로, 경북에서 시외버스 운전기사로 일하던 한 시민의 사건은 이를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그는 승객에게 받은 현금 요금 중 2400원을 회사에 입금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해고됐다. 법적 다툼 끝에 대법원은 '횡령 금액의 많고 적음과 관계없이 신뢰 관계를 해손했다'며 해고를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형사처벌은 아니었지만, 그 판결이 남긴 결과는 절대 가볍지 않았다. 단돈 2400원으로 일터를 잃었고, 그동안 쌓아온 경력과 생계가 동시에 무너졌다. '신뢰'라는 말은 법적으로 타당했을지 몰라도 삶의 무게 앞에서는 지나치게 가혹하게 느껴졌다.

또 다른 예로, '초코파이 절도 사건'도 시민들의 기억 속에 남아 있다. 한 보안업체 직원이 회사 냉장고에 있던 초코파이와 카스타드 빵 등 총 1050원 상당의 간식을 꺼내 먹었다는 이유로 절도 혐의로 기소됐다. 1심에서는 벌금 형이 선고됐지만 항소심에서는 절도의 고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면 무죄가 선고됐다. 최종적으로 무죄가 확정됐다는 사실만 놓고 보면 사법 정의가 회복된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개인은 형사 피고인이 됐고 직장과 사회적 평판, 미래에 대한 불안을 감내해야 했다.

이 사건들을 법적으로 단순 비교하는 것은 무리라고 할 수도 있고 적용된 법률도 다르고 판단 기준도 다르며, 사건의 성격 역시 동일하지 않다. 그러나 시민들이 느끼는 감정은 법률적 구분과는 다른 차원이다. 권력과 가까운 사건에서는 법이 복잡하고 조심스럽게 작동하는 반면, 평

범한 시민의 실수와 일상에서는 '원칙'과 '신뢰'라는 이를 으로 즉각적인 제재가 가해진다는 점이다. 어떤 사건에서는 증거의 미세한 균열이 무죄로 이어지고, 어떤 사건에서는 사소한 금전 문제가 삶 전체를 흔든다.

결국 시민들이 던지는 질문은 단순하다. 왜 누구에게는 법이 이렇게 관대하고, 누구에게는 이렇게 엄격한가. 수사에 좌우되는 기준은 무엇이며, 기소 여부는 어떤 사건에서 더 쉽게 결정되는가. 비싼 변호사를 쓸 수록 승률을 보장받는 구조는 아닌가. 이러한 질문들은 반복된 경험 속에서 누적된 문제의식이다.

법이 신뢰를 잃는 순간은 판결이 마음에 들지 않을 때가 아니다. 같은 사회에서 전혀 다른 기준이 적용된다고 느껴질 때다. 시민이 법 앞에서 고개를 숙이지 않게 되는 순간은 법이 공정하다고 믿지 못하게 되는 순간과 맞닿아 있다. 기본과 기준은 모두 같아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법은 보호 장치가 아니라 불신의 대상이 된다.

지금 우리 사회에 필요한 것은 새로운 법이 아니다. 이미 존재하는 법을 누구에게나 같은 높이의 기준으로 적용하려는 최소한의 일관성이다. 기득권의 범죄는 법리의 숲 속으로 들어가고 시민의 실수는 곧바로 삶의 위험으로 돌아오는 구조가 반복된다면, 법치에 대한 신뢰는 회복되기 어려울 것이다.

기본과 기준이 다르다는 인식이 굳어지는 순간, 법은 더 이상 공동체의 최후 보루가 아니다. 시민들은 법을 믿지 않고 대신 의심한다. 그 의심이 쌓일수록 사회는 거칠어지고 갈등은 깊어진다. 법은 누구의 편도 아니어야 한다. 최소한 강한 자에게 더 관대하고 약한 자에게 더 엄격하다는 의심만큼은 남기지 말아야 한다. 그것이 법이 지켜야 할 최소한의 품격이다.

사설

마트 규제완화 전통시장 살리기 병행해야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가 대형마트의 '새벽 배송'을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최근 정청래 민주당 대표와 김민석 국무총리, 강훈식 청와대 비서실장 등이 참석해 제6차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이같은 방향으로 유통산업 발전법을 개정키로 한 것이다.

이는 현재 법이 지난 2012년에 제정돼 당시 영업비중이 높던 오프라인 기업에만 적용돼 제외된 온라인 기업과의 형평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다.

즉, 전통시장 등 골목상권 보호를 위해 대형마트의 경우 '0시부터 오전 10시까지 영업시간 제한', '매월 이틀의 의무휴업일 지정' 등의 규제를 담았지만 빠른 산업 변화를 반영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실제 이로 인해 손발이 묶인 대형마트는 매출이 정체됐고 쿠팡 등 온라인 기업은 새벽배송 시장을 사실상 독식하며 외형을 급격히 키워 왔던 것도 사실이다.

이의 해소를 위한 당·정·청의 이런 움직임 속에 광주 지역 대표 경제 단체가 이와 관련한 공동 제언을 해 눈에 띈다.

광주경찰총협회가 9일 보도자료를 내고 대형마트 규제 완화와 병행해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을 살리기 위한 종합적 제도설계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규제강화에 의존했던 전통시장 보호정책을 이제는 시장 자체의 경쟁력과 접근성, 디지털 전환 등 체질적 개선을 통해 전통시장 활성화로 방향을 전환해야 한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정부의 직접 지원 강화 등을 통해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이 소비 환경 변화에 대응할 수 있게 만들어야 한다는 얘기다.

이를 위한 제안으로 전통시장을 '장 보는 공간'이 아닌 여가·문화 기능을 결합한 복합 공간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했다.

주차장 확충과 노후 시설 정비 등 기반 시설 개선과 함께 문화·체험·휴게 공간 등이 있고 상시 문화 행사도 열리게 해 가족 단위 방문을 유도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 전통시장 통합 배송·택배 시스템을 구축해 온라인 주문 시 당일 배송이 가능하도록 하는 등 디지털 전환도 지원해야 하고 대형마트와 전통시장을 연계한 공동 프로모션, 지역 특산물 기획전 등 대형 유통업체와의 상생 구조 마련도 필요하다고 했다.

광주경총의 골목상권 살리기를 위한 이같은 제언들이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에 최대한 반영되길 바란다.

광주송정역 승강장 체계 개편 성공하기

만성적인 교통혼잡으로 악명이 높은 호남의 관문 광주송정역 일대 승강장 체계가 확 바뀐다 한다. 광주시가 이 일대 승·하차장을 분리하는 등 새로운 승강장 시스템을 도입, 시범 운영에 들어간 것이다.

사실 송정역 일대는 그동안 상습 교통 정체와 무질서한 승·하차로 시민 불편이 반복돼 왔다. 승강장 주변은 항상 승·하차 차량, 택시, 플랫폼 호출 차량이 한데 뒤섞여 극심한 혼잡을 빚고 있었고 특히 출·퇴근 시간 대와 주말, 명절을 앞둔 시기에는 정도가 더 심했다. 차량이 한꺼번에 몰리면서 정체가 반복됐고 승객을 태우기 위해 정차한 차량과 이를 피해 이동하는 차량이 억기며 사고 위험도 상존해 왔다.

보행 환경도 문제여서 호출택시를 이용하는 승객들이 차량을 찾기 위해 차도를 오가는 일이 잦았고 역 출입구 주변에서는 무질서한 정차로 보행자와 차량 간 충돌 위험이 높아지지 않았다.

이 때문에 광주시는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고 이용객 편의를 높이기 위해 이 일대 승강장 교통 체계를 대대적으로 개편키로 한 것이다.

호출택시 승·하차 구간을 기능별로 분리하는 것이 핵심이다 한다.

기존 도시철도 광주송정역 5번 출구 인근에 접종돼 있던 승·하차 차량 혼잡을 개선하기 위해 전방 약 100m 지점인 3번 출구 앞에 '하차 전용구역'을 새롭게 조성키로 한 것이다. 또 카카오·우버택시·티머니 등 모바일 플랫폼 회사와 협업해 내비게이션 목적지를 '광주송정역'으로 설정할 경우 자동으로 '하차 전용구역'으로 안내되도록 시스템을 개선하는 것도 잊지 않았다. 현재 택시 대상으로만 적용 중이지만 향후 일반 차량으로 확대한다고 한다.

플랫폼 택시 이용 증가에 대비, 지하철 광주송정역 2번 출구 앞에 '호출택시 승차대'도 신설했다. 플랫폼 시스템 설정을 통해 지정된 승차대에서만 택시 호출이 가능하도록 해 일반 대기 택시와 혼선을 줄이고, 승객이 차량을 찾기 위해 차도를 오가는 문제를 해소해 보행 안전을 강화했다.

자가용 이용객은 역 앞 도로가 '절대 주정차 금지구역'인 점을 고려해 30분 무료 회차'가 가능한 광주송정역 주차 빌딩 이용을 권장키로 했다.

광주를 찾는 관광객과 시민들에게 편리한 교통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된 이번 승강장 개편이 이들 모두가 체감할 수 있는 개선 효과를 거둘 수 있길 바란다.

기고

AI 시대, 보훈행정이 나아가야 할 길

김종일



광주지방보훈청 총무과장

직원 AI 인식 확산과 실무 역량 제고를 핵심 과제로 삼고 단계적인 노력을 이어왔다.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한 AI 실무교육과 선진기관 견학, 연구모임 운영은 'AI를 이해하는 것'에 머무르지 않고, 'AI를 실제 업무에 적용해 보는 경험'을 축적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특히 작년 10월 직원 참여형 AI 업무혁신 경진대회는 현장에서 느끼는 불편과 문제를 스스로 정의하고, 기술을 통해 해결 가능성을 모색해보는 실험의 장이 되었다.

이 과정에서 축적된 경험은 일부 업무 영역에서 구체적인 성과로 나타났다.

경진대회 최우수 사례로 선정된 '행정소송 답변서 자동 작성 AI'는 보안이 중요한 보훈 행정의 특성을 고려해 완전 오프라인 환경에서 운영되도록 설계됐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방대한 소송 자료와 민원 문서를 요약·분석해 답변서 초안을 작성함으로써, 반복적 문서 검토에 소요되는 시간을 줄이는 데 기여했다. 이는 행정 지원 도구로서 AI 활용 가능성을 확인한 시도이다. 현장의 부담을 덜 수 있음을 보여준 사례라 할 수 있다.

이와 함께 민원 통계 작성 등 정형화된 일부 반복 업무를 중심으로 AI 기반 자동화를 시험적으로 적용했다.

그 과정에서 업무 처리 효율성과 정확성에 대한 개선 가능성은 확인했고, 이는 AI 특정 업무를 대신하기보다 일하는 방식을 돌아보게 하는 계기가 될 수 있음을 보여줬다.

경진대회 최우수 사례로 선정된 '행정소송 답변서 자동 작성 AI'는 보안이 중요한 보훈 행정의 특성을 고려해 완전 오프라인 환경에서 운영되도록 설계됐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방대한 소송 자료와 민원 문서를 요약·분석해 답변서 초안을 작성함으로써, 반복적 문서 검토에 소요되는 시간을 줄이는 데 기여했다. 이는 행정 지원 도구로서 AI 활용 가능성을 확인한 시도이다. 현장의 부담을 덜 수 있음을 보여준 사례라 할 수 있다.

이와 함께 민원 통계 작성 등 정형화된 일부 반복 업무를 중심으로 AI 기반 자동화를 시험적으로 적용했다.

그 과정에서 업무 처리 효율성과 정확성에 대한 개선 가능성은 확인했고, 이는 AI 특정 업무를 대신하기보다 일하는 방식을 돌아보게 하는 계기가 될 수 있음을 보여졌다.

광주지방보훈청은 이러한 인식 아래, 지난 한 해 동안

이러한 시도는 행정 내부에만 머물지 않았다. 'AI음원 쇼케이스 콘서트', '메모라이 (MEMOR+AI) 보훈문화제' 등 AI를 활용한 콘텐츠 제작과 공연, 체험형 행사는 기존의 기념식 중심 보호에서 벗어나, 국민이 보다 쉽게 참여하고 공감할 수 있는 보훈문화의 가능성을 보여줬다. 기술과 문화, 행정이 결합된 이러한 실험은 AI가 효율의 도구를 넘어, 보훈의 가치를 전달하는 새로운 매개가 될 수 있음을 시사했다.

올해 광주지방보훈청은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AI 활용을 보다 단계적으로 이어갈 계획이다. 실무 중심의 AI 활용 교육을 지속하고, 직원 참여형 경진대회를 통해 현장에서 제기되는 다양한 아이디어를 접·검토해 나갈 예정이다. 이는 단기간의 성과를 목표로 하기보다는, 변화하는 환경에 대비해 보훈행정이 스스로 학습하고 준비해 나가기 위한 과정이다.

AI 시대에 행정이 해야 할 역할은 새로운 기술의 가능성과 쓰임을 차분히 살펴 공공의 가치에 맞게 활용하는 일이다. 중요한 것은 기술 그 자체보다 변화에 대비하려는 태도다. 우리에게는 2000년대 초반 정보화의 물결을 거스르지 않고 온전히 받아들이 디지털 사회로의 이행을 내재화한 경험이 있다.

지금 AI의 물결은 어찌나 국가 사회적으로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는 기회인지도 모른다. 보훈행정은 AI라는 시대적 변화 앞에서, 가능한 영역부터 차근차근 참여하며 책임 있는 준비를 이어갈 것이다.

최재수첩

문화가 '경제력'인 시대

송대웅



산업부 차장

산업의 체급을 따져보면 더 이상 가볍게 넘길 수 있는 숫자가 아니다.

더 주목할 대목은 이 산업의 성격 변화다.

해외 매출이 3년 만에 60% 넘게 늘어나며 대중문화예술산업은 명확한 수출 산업의 궤도에 올라섰다. K-팝은 중심으로 한글로별 활동과 팬덤 확장은 이제 '한류'라는 표현보다 '외화 획득 산업'이라는 말이 더 어울린다.

산업이 커지면서 내부 구조에서도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표준전속계약서 체결률과 제작 스태프의 시장계약률이 95%를 넘긴 것은 이 분야가 열정과 판행에 기대된 시기를 지나 제도와 규범을 갖춘 산업으로 이동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공정성과 투명성에 대한 요구가 현장에서 일정 부분 성과로 이어지고 있다는 점은 긍정적이다.

다만 성장의 이면을 들여다보면 과제도 분명하다.

대중문화예술인의 실제 예술 활동 수입은 전체 소득

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고 연습생 규모는 오히려 줄었다. 산업의 외형은 커졌지만 내부의 소득 구조와 약자 보호는 여전히 취약지점이다.

이는 대중문화예술산업을 단순히 '잘 나가는 산업'으로 소비하는 안 되는 이유다. 성장 국면에 접어든 산업일수록 노동 환경과 권리 보호, 수익 구조의 지속 가능성을 함께 점검해야 한다. 숫자가 커질수록 책임과 기준 역시 함께 높아져야 한다.

또 하나 주목할 점은 '지역경제'와의 연결이다. 대중문화예술산업은 일부 대형 기획사에 국한된 산업이 아니라 지역 제작사와 스태프, 공연·관광·연관 서비스업으로 파급되는 구조를 갖고 있다. 콘텐츠 한 편, 공연 하나가 지역소비와 일자리를 움직이는 사례는 이미 확인되고 있다.

이제 고민해야 한다. 대중문화예술산업을 계속 문화 정책의 주변부에 두 것인지, 아니면 산업 정책의 한 축으로 인식할 것인가. 콘텐츠는 취향의 문제가 아니고 일자리이다. 수출이며, 성장 동력이다. 이제 문화는 산업을 넘어 분명한 '경제력'이다.

광남일보

www.GwangNam.co.kr

회장 양진석	대표이사 박형인	차재진	사장 민정배	이승배</th